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투표

기호2번을 지지하자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투쟁하는 민주노총, 언행일치 지도부”

민주노총 첫 임원 직선제 투표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 이 집행부가 표독스럽게 노동자를 공격하는 박근혜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강조하고, 다시금 의료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IMF 위기 때의 악몽을 재현이라도 하려는 듯,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해고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악의 칼을 꺼내 드는 한편 파견제·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공격받고 있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집권했다. 그만큼 독하고 집요하게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우리의 삶을 강도질하려 한다.

투쟁 사령부

이 속에서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지난 십수 년간 많은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총파업’, ‘총력 투쟁’을 외쳤다. 그러나 양보와 타협, “뺑파업”과 투쟁 회피가 잇따랐고, 이는 조합원들의 냉소와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 따라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앞장서 투쟁을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네 선분 중 단연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가 돋보인다. 한상균 후보 조는 ‘투쟁하는 민주노총, 언행일치 지도부’를 내세우며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조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투쟁 사령부가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 ‘철밥통’ 운운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연금, 고용 등에 맹공을 퍼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엄호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장점이다. 한상균 후보 조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강조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에도 적극 연대할 수 있도록 설득·조직하겠다고



박근혜의 공세에 맞서 투쟁을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

말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각개격파 시도에 맞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단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처럼 현장의 투쟁을 방관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홀로 고립돼 싸우지 않도록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과 같은 광장의 저항도 주도해 힘을 발휘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 후보는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을 이끈 장본인이다. 쌍용차 사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쌍용차 파업이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민주노총의 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오히려 장점으

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는 지난해 전교조의 규약시정 명령 거부를 이끌어 신뢰를 주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여러 투사들과 투쟁적인 조합원들이 한상균 후보조를 지지하고 있다. 한상균 후보 조의 당선은 강력히 싸우자는 목소리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호2번을 지지해야 할 핵심 이유다.

투사들이 현장에서 실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투쟁적 지도부가 당선해 공약으로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며 오랜만에 ‘노동’의 주도력을 보여 줘야 한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총투표에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것도 노동운동에 고무적인 소식이었다.

특히 현장의 투사들이 지도부의 투쟁 계획을 활용해 실제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이 맞물려야 한다.

투쟁적 지도부의 등장에 만족하고 쳐다보기보다 기층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투쟁적 지도부의 등장에 만족하고 쳐다보기보다 기층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투쟁적 지도부의 등장에 만족하고 쳐다보기보다 기층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 자신의 투쟁과 활동이다.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다.

좌파 지도부가 투쟁을 공식 선언할 때조차, 현장의 투쟁 조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것이 실제 구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지도부가 제대로 투쟁을 이끌지 못할 때 독립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투쟁을 전진시킬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 회피일 뿐

기호4번 전재환 후보 조

전재환 후보 조는 “준비된 통합 지도부”를 내세운다. 사실상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노총 지도부를 통합적으로 계승하며 상층 경험이 많은 후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결정적 약점이다. 전재환 후보 조는 민주노총 상층의 보수적 투쟁 회피와 관료적 타성이 낳은 폐해에 공동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의원대회 권한 축소 등 관료적 조율과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호4번이 제시하는 투쟁 전략은 2016~17년 총·대선 때 “준비된 투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박근혜의 파상공세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무책임한 투쟁 대가론일 뿐이다.

지난해 말 철도 파업과 민주노총 침탈 때가 하나의 증거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광범한 분노를 즉각 항의운동으로 조직하지 않고 준비가 필요하다며 두 달 후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런 소심한 대응은 무리수를 둔 정권에 한숨 돌릴 여유를 줬고, 정작 파업은 별 타격을 주지 못했다.

과거 이수호-조준호 집행부도 ‘준비된 투쟁’을 말하며 투쟁 건설을 회피하고 사회적 교섭에 미련을 갖다가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막지 못했다.

전략적 야권연대

기호4번이 전략적 투쟁 시기를 선거 때로 맞춘 것을 보면, 사실상 핵심 목표는

정권 교체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략적 야권연대로 귀결된다. 그 핵심 수단은 “진보대통합”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자본가 계급의 비주류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투쟁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일관된 투쟁 건설 노력을 해친다.

더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처럼 전략적으로 ‘진보대통합’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배타적 지지 방침 결정 시도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노동운동을 분열시킬 것이다. 진보정당과 좌파들 안에서 자유롭게 지지를 선택하는 진보·좌파 다원주의가 투쟁으로 조합원들을 단결시키는 데에 현실적이고 현명하다.

한편, 기호4번은 ‘기업과 산별 노조는 임단협을 하고,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하자’는 일종의 역할 분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투쟁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이 걸린 투쟁이 될 수 있다. 개별 투쟁들의 성패는 불가피하게 전체 계급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곤 한다. 2007년 이랜드 파업,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 2013년 철도 파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모든 경우에서 기호4번이 계승한 전 집행부들은 제대로 된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제 투쟁적 조합원들은 이런 무사안일한 지도자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

투쟁인가 혁신인가

기호3번 허영구 후보 조

허영구 후보 조는 좌파노동자회가 낸 팀이다. 기호3번은 “5대 혁신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조직체계와 재정체계의 개편”을 강조한다.

기호3번이 조직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좌파노동자회의 근본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좌파노동자회는 민주노총이 “자본에 포섭”됐고, “어용의 길로 돌아섰[고]”,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의 주요 구성원인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불신이 깊다. “노동계급의 상층”에 위치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통해 착취한 잉여분의 일부를 ... 떡고물”로 받는다. 그래서 옆의 노동자가 죽고 다쳐도 “자신의 임금과 일자리만 지키면 그만”이다.

민주노총과 그 주요 구성원을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투쟁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기호3번은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를 대거 조직해 그들이 민주노총의 중심이 돼야 비로소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조직 혁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혁신 우선론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신이 근저에 깔려 있다.

정규직에 대한 불신

그래서 기호3번은 최초 직선제의 핵심 공약으로 “민주노총 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민주노총 조합원은 혁신의 주인공이 못 된다. 조합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로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조직화에 들어가는 돈을 대는 것뿐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비정규직 투쟁 경험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과 정규직의 실질적인 연대다. 진정한 좌파라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도록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선을 긋는 것은 사용자 측의 이간질에 말려들어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킬 뿐이다.

또, 기호3번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개혁주의라는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노동조합 조직 구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단위노조와 산별연맹 지도부가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조직 형식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기호3번은 ‘점거하라’ 운동을 본판 ‘여의도 점령 투쟁’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벌어진 광장 점거 운동은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오를랜드를 제외하면) 조직 노동자의 결정적 힘을 가동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호3번은 고용 노동자들이 이윤체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놓침으로써, 효과적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으로 공무원연금 지킬 수 있나?

기호1번 정용건 후보 조

정용건 후보 조는 민주노총이 연금, 의료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를 중심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야당과의 연대를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연일 배신을 일삼는 새정치연합에 기대서는 이를 이룰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 개악 문제에서도 새정치연합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악안의 기본 방향을 수용하고 자체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라는 압력을 키울 수 있다.

기호1번이 제시하는 다소 기계적인 분업, 즉 산별연맹은 임·단투를 맡고 민주노총 중앙은 사회개혁 투쟁을 하자는 것도 사회개혁을 성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민주노총이 사회개혁 과제와 현장 조합원들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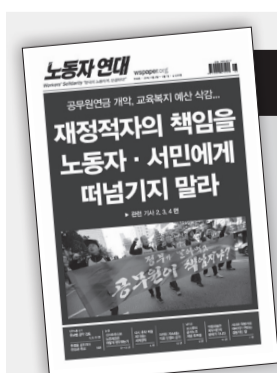
투쟁을 잘 결합시켜야 동력도 커질 것이다.

기호1번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데도 약점이 있다. 예컨대, 그가 강조하는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보험료(세금)를 올리면 부자들도 세금을 올리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규직의 선(先) 양보가 곧 비정규직의 소득과 조건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맹점이 있다. 오히려 정규직 책임론 같은 주장에 힘이 실려 노동자들의 단결에 해롭다.

진정으로 격차를 줄이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 비정규직 처지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민주노총 선거 관련 기사 전문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를 보세요.



노동자 정치 신문

<http://wspaper.org>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